

# 가구주 절반 “부모 부양, 정부·사회도 책임져야”

### 통계청, 한국 사회동향·65세 이상 거주 ‘노인부부가구’ 48.4%

### 노인 2명 중 한명 “거동 불편할때 현재 집에서 재가서비스 희망”

### 노인 33.6% “계속 일하고파”...장례 방법으로 ‘화장’ 희망 71.5%

가구주의 절반이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3분의 1은 일을 하고 싶어했고 절반 이상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물며 재가보호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했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기 거주 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48.4%로 가장 많았다. 9년 전인 2008년(47.1%)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노인독거가구’는 2008년 19.7%에서 2017년 23.6%로 3.9%포인트 늘었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7.6%에서 23.7%로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형태를 묻는 문항에는 57.6%가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 계속 거주’를 꼽았다. 노인이 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비율은 31.9%였고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10.3%에 불과했다.

생활비와 의료비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답변은 12.6%, 사회복지기관 부담은 6.9%로 나타났다. 간병비의 경우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았다.

만 13세 이상 가구주의 48.3%는 부모 노후 돌봄 주체를 ‘가족과 정부·사회’라고 답했다. ‘정부·사

회’(5.7%)라고 밝힌 비율까지 합하면 54.0%로 높아진다. 이는 2008년의 47.7%보다 6.3%포인트 높다.

반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비율은 26.7%로 2008년의 40.7%보다 14.0%포인트 낮아졌다.

노인의 33.6%는 계속 일할 의향이 있었다. 22.5%는 현재 일을 유지하고 싶다고 했고, 1.8%는 다른 일을 찾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띄었다.

노인 10명중 6명(59.5%)은 상속 방법으로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7.3%로 2008년(9.2%)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희망한다

는 노인은 전체의 71.5%에 달했다. 매장은 17.5%,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은 8.9%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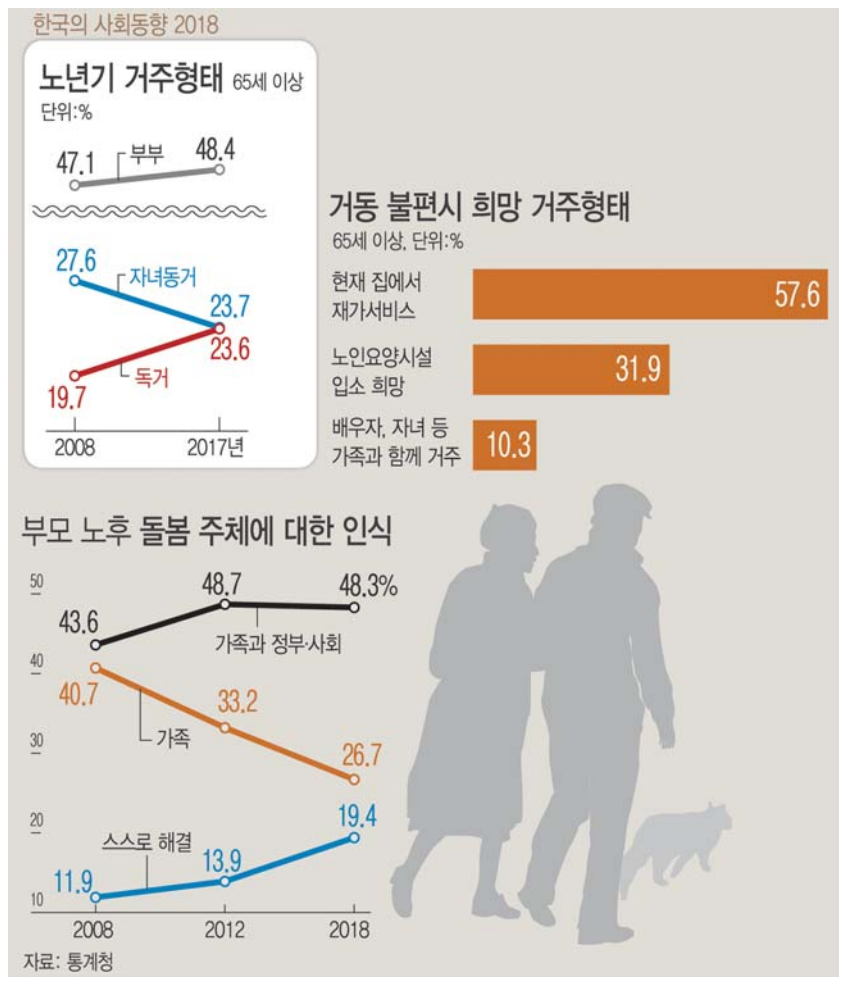
2017년 기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비율은 51%였다. 2008년에 비해 20.3%포인트 늘어 ‘유병장수시대’가 도래했음이 확인됐다.

치매 진료자 수는 2017년 기준 45만9000명으로 2013년보다 1.5배 늘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증가 폭은 1.8배로 더 컸다.

장기요양인정자 중 치매 및 중풍 질환자의 비중은 42.9%였다. 보험제도 초기의 31.3%보다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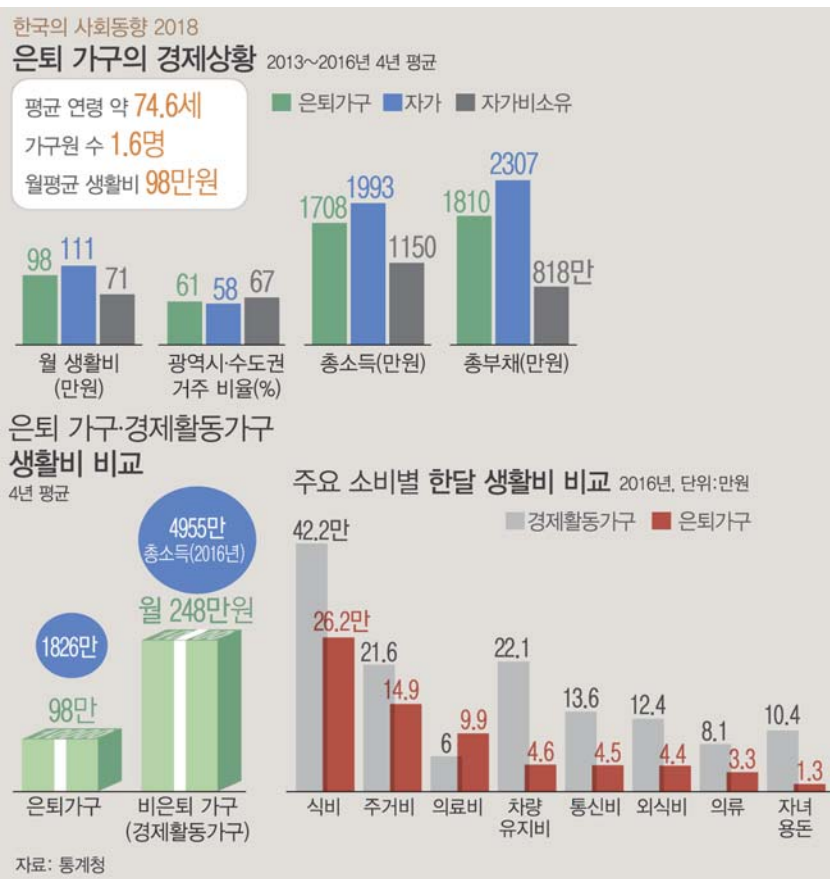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규모도 2008년 6만4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7년 20만여 명으로 확대됐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1700곳에서 2017년 5304곳으로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6618곳에서 1만 5073곳으로 각각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도 34만1000명으로 2008년보다 약 3배 늘어났다.



## 은퇴가구 생활비 ‘월 98만원’...醫食住로 절반 써

### 소득의 64% ‘이전소득’...은퇴5가구 중 1가구 ‘부동산소득’ 보유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했다.

월평균 생활비가 100만원이 채 안됐고 식비·주거비·의료비의 3대 소비 비목에 생활비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경제활동가구보다 40% 더 많았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13~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약 74.6세이고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826만원(월평균 152만원)이었다. 경제활동가구(4965만원)의 36.9% 수준이다.

은퇴 가구 총소득의 64%가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은퇴 가구 중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율은 88.5%,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는 82.5%로 나타났다.

은퇴 가구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이었다. 은퇴 가구 5가구 중 1가구 꼴이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은퇴 가구의 비율은 각각 14%, 9%로 조사됐다.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경제활동가구(248만원)의 39.5% 수준인 98만원이었다. 식비·주거비·의료비로 생활비의 50%를 쓰고 있었고 이중 의료비는 9만3000원으로 경제활동가구(6만원)보다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11만원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았다.

은퇴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4배 가량 높았다.

## 주거 문제 겪는 청년 38%가 서울에

### “부모 지원 감소·고용 불안정·주거비 부담...문제 심각”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의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 가구는 약 69만가구로 전체 청년 가구(454만2088가구)의 15.2%다. 이 중 서울에 38.2%가 살고 있다. 경기도 13.8%, 인천 3.7%로 수도권에만 약 56%가 집중돼 있다.

서울에 분포된 가구 중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 가구의 비율은 25.2%로 평균(15.2%) 이상이었다. 경기(8.7%)나 인천(10.3%) 등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서울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문제를 경험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았다.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1318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 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날 청년 주거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기대수령의 증가, 은퇴 후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 필요 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녀에게 보유 주택을 상속하지 않으려는 고령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부모 세대의 주거 지원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 소득 수준과 직결되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의 25.9%가 비정규직”이라며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건 곧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용 가능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움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주거 비용을 매달 임대료로 지불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할 때도 전세금, 보증금 등 목돈이 필요하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자산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청년 가구는 주거비 부담의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지역광고·이벤트·정리·정리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